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구걸외교’ 중단하라”

한·일 국장 및 고위급 협의하며 피해자 접촉 ‘투트랙’ 추진 비난 일본 “피고기업 배상 참여 불가”...한국 정부 수용 방침에 ‘분통’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대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은 정부의 해법안을 ‘구걸외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간 국장급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양 국 장·차관이 나서는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과의 만남을 진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한국정부의 제3자 대외변제안은 사실상의 배상’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회 이사장은 “지난해 20일 외교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의 법률대리를 해온 김경희 변호사를 통해 국내외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요청한 면담대상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를 한 14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존해 있는 당사자는 3명이고 숨진 11명은 유가족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외교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및 법률대리인 등은 외교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에 제동을 건 점에 대해 외교부에 공식답변을 요구한지 40일이 지났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양금덕 할머니를 만난 뒤 한 것은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훈장에 제동을 건 것 뿐이었다”면서 “지금껏 피해자와 소통하겠다고 하고선 피해자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해법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나 ‘직접 사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 중인 한일 외교 당국은 지난 16일 도쿄에 이어 2주만인 지난 30일 서울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언론에서 연일 ‘한일 양측이 한국 쪽이 검토중인 징용공 소송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금전적 부



광주·전남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준비위원회가 3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했다.

담 등에 대해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직접 관여를 피하는 형태로 배상을 짓기 위한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새로운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를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정부도 수용하는 모양새로 알려져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은 오는 3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년만의 정부 관계자의 일본 방문을 앞두

고 걸림돌인 강제징용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피해자를 욕보이는 구걸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준비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굴욕외교’를 펼치자, 일본 정부는 이참에 ‘구상권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피고 기업들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할 대상이지, ‘성’의 구걸하거나 ‘호’를 사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글·사진·민헌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세월호 유족 2차 가해’ 868억 국가배상 확정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가 최종 확정된 점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지난 12일 서울민사14부의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정 유가족이 청구한 총 1110억원 중 86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반대”

시교육감 공약평가배심원단 “공립유치원 경쟁력 약화시킬 것”

광주시교육청이 구성한 교육감 공약평가배심원단들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1일 보도자료에서 “공약평가배심원단이 이정선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시교육청은 ‘공약평가배심원단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배심원단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의해 지원하는 곳이다. 국공립유치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공약평가배심원단은 이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기구로, 시교육청에서 구성한 기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교육감이 만 5세 유아 대상 교육비로 2024년 20만원·2025년

40만원 지원, 사립유치원의 수업대체 인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국공립유치원이 없어 사립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는 사립유치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공립 지원율이 전국 꼴찌”라며 “국공립 지원율은 18.7% (단설 6.8%·병설 11.9%)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3년학년도 유아모집이 안돼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에 “무상교육을 사립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유치원 지원율이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면서 “사립에만 교육과정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면 공립유치원은 경쟁력을 잃고 고사 위기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스크 없는 졸업식 전남여고 졸업생들이 31일 모교에서 밝은 표정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마스크를 벗은 학생들의 환한 얼굴에서 코로나19를 털어버린 출가분함이 느껴진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교대 등록금 4% 인상

광주·전남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부분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교육대만 4%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교육대는 지역 대학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모두 인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교대는 전일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4%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인상은 전국 대부분 교육대가 마찬가지다.

또 전남대가 대학원 등록금을 2~2.5% 인상하기로 했으며 목포대는 2월 초 심의를 남겨뒀지만, 이번이 없는 한 동결할 전망이다. 호남대는 박사과정 대학원 등록금만 4%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의 광주·전남 4년제 대학들은 등록금을 최장 15년째 동결하기로 했다.

광주교대 측은 “교육대는 학생 수가 적고, 예산 규모가 협소해 대학 재정이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광주교대도 14년간 동결을 유지했지만, 대학 재정이 한계지에 다다라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국제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형일: 2023. 2. 6(월)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무)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형일: 2023. 2. 6(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